

지역주도형 그린 뉴딜 추진의 방향과 과제

- 대전시의 사례를 중심으로¹⁾

강영주(대전세종연구원)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각 지역의 지역형 뉴딜 정책은 매우 단기간에 기존 사업들을 짜맞추고 정부사업 중 국비 확보가 가능한 사업을 추가하여 보완하는 형태로 제시되고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뉴딜의 철학을 반영하며 부의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치가 제시되고, 뉴딜의 성공을 위한 핵심인 사회적 합의가 확보된 후에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사업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구조개선을 위한 장기적 과제가 조화를 이루어야 함에도 이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 없이 추진 되는 지역주도형 뉴딜은 반드시 한계점을 노출할 수밖에 없다. 아직은 정책 초기로 구체적인 사업추진 이전이므로 지금부터라도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지역주도형 뉴딜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시스템의 변혁을 위한 수요가 지역에서 발생하므로 수요를 찾아내고 변혁의 실마리와 방안을 제시하는 것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분야의 탐색,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을 실험하고 공유하는 것은 지역의 중요한 역할이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추진의 궁극적 이유(why)와 사업대상(who), 사업목적과 효과(what), 사업추진 방법(how), 사업추진 일정(when) 등을 분명히 함으로써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는 것도 지역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 부분에서 지역과의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뉴딜 계획이 그 성과를 나타내고, 각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통일된 대응 목표치를 제시해야 하고 각 지방정부별 계획수립이 최종 목표치를 향하여 일관성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표준 계획수립 메뉴얼을 작성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 부분에 있어서는 그린뉴딜계획이 모든 지자체가 추진하여야 하는 공통의 사업과 경쟁사업으로 나누어 정비되어야 하고, 국토종합계획을 비롯한 녹색성장계획 등 각종 계획과의 조정작업과 추진체계의 조정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이 글은 저자가 2020균형발전정책박람회(2020.11.10.)에 발표한 원고를 일부만 수정하여 게재하였음